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대에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양립한다. 긍정적 평가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제1공화국은 6.25 전쟁의 피해를 이겨내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조약과 미국의 무상원조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이 있다. 또한, 군사적 안보와 경제 위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그에 대한 의견이 양립되는 이유는 그의 정치 행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도입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에 사용된 방향 때문이기도 하다. 정승현의 “이승만과 한국 자유주의: 중기 사상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정치를 위해 사용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자유주의가 근본적인 자유주의와 달리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저자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국가, 국민 만들기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치 체제 혹은 정치적 제도로 받아들였다. 즉, 자유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여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접근한 것이다. 이승만이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게 된 이유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였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에 집중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애국심을 향상시키며, 애국심을 가진 국민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했다. 국가에 희생하는 개인은 곧 부국강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의 관점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옳지 못한 이념이라고 비판 받는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은 국민에게 권리가 있어서 국민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식 자유주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승만은 민중이 우매하다는 전제하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중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지더라도 자신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국가들은 타 국가를 침략할 때, 아직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체계를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국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국주의식 “자유민주주의 주입”은 자기부정을 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권주의가 아닌 국가주의로 이끌었다. 게다가,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 국가에 원했던 절대 복종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원했던 것과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

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존엄성 보다 국가라는 틀이 우선된 점이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일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위의 내용처럼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저자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못한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2가지 이유를 들며 비판론자들의 비판에 반박하고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한국식 자유주의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가 언급하는 첫번째 이유는 보수와 진보세력 양쪽에서 보수적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연구 시간의 교정을 언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삼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서양의 시각을 걷어내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학자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저자의 결론을 비판한다. 우선,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내린 제안은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한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보수적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인정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채택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수가 인정하는 내용은 사실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더라도 여러 명이 주장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즉, 저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양쪽 진영에서 인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사실로서 전제한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불가피한 시대상의 반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올바른 형태의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문화 간 우열성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이식한다면 그때의 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랐을 것이다. 게다가, 개화기 조선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시대를 극복했다면 저자가 말하는 한국형 자유 민주주의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 운동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세도정치가 심해져 대부분의 농민이 사유지를 갖지 못한 채 소작농으로 살아가다가, 이에 분노하여 동학농민운동을 벌이게 된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들이 사유지를 확보했다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을 수도 있다.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더 나은 조건에서 이룩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저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더 나은 조건에서 도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국형 민주주의는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형태로 나타났다.